

도내 뿌리기업 아세안시장 진출

아세안 시장개척단 참여 호원정공, 방글라데시서 냉동닭차 60만불 수출계약 체결

전북도는 뿌리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의 해외마케팅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호원정공이 약 60만 불의 냉동닭차(3.5등급 12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뿌리기업 7개사가 중심이 된 아세안 시장개척단은 바이어 매칭 및 현지 산업조사 등 4개월에 걸친 사전준비를 통해 태국 및 방글라데시의 3개사와 현지 수출 상담을

추진했다.

또한 방글라데시와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전라북도 뿌리기업과 현지 자동차부품 기업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호원정공(대표 김호중)은 지난 수개월간 방글라데시에 자사제품 수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5일 알리바바모터스와 수출을 위한 MOU체결과 함께 약 60만불의 냉동닭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주)호원정공은 2014년 5월 원주 봉동에 설립된 전기차, 특장차부품 전문 유망기업으로 2017년부터 방글라데시,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방글라데시 계약과 함께 올 하반기에는 베트남에 다목적 1톤 운반차량 수출성사를 앞두고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이번 방글라데시 수출 계약 체결은 참여되어 있는 전북 수출과 경감소

재성형산업, 특장차산업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며, 도내 뿌리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해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역할을 계속해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성종용 산업진흥과장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생산기반업체 공정 개선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글로벌비즈니스 공모사업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뿌리분야 수출전문기업 40개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계엄령 문건, 복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심각성 인지”

靑 “보고 과정에서 위중하다 판단”

청와대는 17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직접 확인하고도 특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복합적으로 들여다 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단순히 문건 뿐 아니라 당시의 정황 등을 복합적, 입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기무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하던 중 계엄령 문건의 존재 여부를 구두로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당 문건을 6월28일 청와대가 확인하고도 지난 10일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름 가량 특장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문건을 한 번 봤다 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점진적으로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 보고 당시의 정황을 맞춰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번이나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보고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위중하게 받아들여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훨씬 더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그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여다보기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 와 그 이하부대에 지시한 해당 부대에서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서 내지는 보고내용 전부를 제출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제출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해야 할 문서들이) 무슨 책상 위 내지는 캐비닛 서랍 위에 꽂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여부부터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



장학재단 전북출장지원센터 개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욱)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북지역 대학생의 맞춤형 학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출장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독도 일본땅” 日 학습지도 해설서 개정 즉각철회를”

정부가 17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대대적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관한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스

“공로연수 6개월 남은 과장급 직원 승진인사 지양돼야”

익산 정기인사 ‘뒷말 무성’

최근 익산시가 공로 연수를 불과 6개월 남겨둔 과장을 승진인사한 것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조직의 안정성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인사가 자칫 선심성 인사로 비칠 수 있다는 것.

승진된 국장이 6개월 뒤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또 다시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 밖에 없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데다 지휘체계에 안정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재선 이후 첫 번째 단행한 이번 정기인사에서 A 복지청소년과장과 B기획예산과장 등

2명이 4급으로 승진, 각각 복지환경국장과 의사국장으로 보직을 받았다.

하지만 A 복지환경국장의 경우 올해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불과 6개월 후 복지환경국장은 또 다시 바뀌게 된다.

익산시는 예년에도 이같은 사례가 반복된 경우가 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수년 전 C 국장과 D 국장의 경우 불과 공로연수 6개월을 앞두고 5급서 4급으로 승진, 6개월간 복지환경국장으로 재직 후 공로연수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익산시청 직제 체계 상 복지환경국장 지리는 산하에 8개과를 배치, 국장급중 가장 방대한 조직을 이

끌고 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복지환경국장이 업무과과도 제대로 하기도 전인 6개월만에 자주 바뀌므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크게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이같은 인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공로연수 6개월 전 공무원을 국장자리에 승진시킬 경우 자칫 선심성 인사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6월 간부회의에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해 공로연수 1년이하 남은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인사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도의회 환복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내실 추진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7일, 새만금추진지원단, 환경녹지국, 남원의료원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했다.

최찬욱 위원장(전주10)은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관련 국가예산 반영률 제고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해소와 분발을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새만금 전문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정책개발 관련 기대효과 제고와 우리 도의 주요현안들이 무엇인지 물으며 제반 주요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새만금추진지원단 운영인력 관련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조속한 충원과 인대용지 확보, 수질개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청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새만금 장기 임대용지 확보 관련 일반용지와 비교하여 임대료 수준 정도와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물으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새만금 투자유치 관련 타지역 기업들의 새만금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일자리창출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제반 애로사항등을 물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축산 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 개선 관련 축산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조치사항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축산 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 개선 관련 새만금 부분연료화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 조사에 대해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